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정책 마련할 것”

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글 | 이은정 _ KBS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인 서상기 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은 17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이번에 지역구(대구 북구)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과기부총리 체제 폐지, 과기부와 교육부와의 통합 등 복잡한 정세 속에서 시작된 18대 국회에 대해 서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과학에 관심을 갖고 정부를 독려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Q 이제 18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개원하고 보니 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남은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과학계를 대표하던 여당, 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고 또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부위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17대 국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제가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인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오직 연구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을 평생 지원하는 정책을 수

립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회에 온 이유이며, 앞으로 과학기술인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Q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공계 출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이공계 모임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까지 학부 전공이 이공계인 분들을 모아보니 26명이 되더라고요. 이공계 출신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현안들을 법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활성화해서 상임위의 벽을 넘어 과학기술인의 요구를 정부에 전하고 법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Q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통합으로 과학계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인의 한 명으로서 통합에 대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현 체제 내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이 그것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 없이는 현실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없고 국가적으로 초일류 과학국의 길도 요원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으면

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포상을 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IT 등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수익 중 과학기술인에게 지원하는 5% 한도 내에서 100% 세액공제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준비해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초일류 인재양성, 장학금혜택, 병역혜택, 연금도입, 정년환원, 과학기술인국립현충원 건립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년, 2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제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앞장서서 씨를 뿌리고, 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심히 가꾸어 나가면서 뜻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Q 교육부와의 통합에 따른 정책변화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과기정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재래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교육제도를 바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의 원인을 평준화 교육에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하게 엘리트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되 영재교육, 초일류 교육 등 선진형 교육패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공급하고, 그 인재들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산업화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동적인 과학기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Q 한국 과학기술계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추진해온 선진 기술을 추격하는 일에 전념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이노베이션 리더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경영 전략과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 근본적인 변

화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주도는 민간주도로, 평준화는 수월성으로, 분배 우선은 성장 우선 정책으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이 인재들이 개발한 기술이 기업을 통해서 산업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교육, 과학기술, 산업의 3박자가 일관되고 입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Q 과학기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 경제도 어렵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큼니다.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IMF 이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위축,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화 등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이 과학기술계에 비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1970년대 국가경제를 부흥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기까지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연구소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하나로 열악한 환경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다시 뛰어야 합니다. 정부도 과감한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앞장서 노력한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목소리를 더욱 더 높여야만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 위상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모임이나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면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은 물론 법 제도화하는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상기 의원 약력

- ▷ 한국기계연구원장
- ▷ 호서대 환경안전공학부 교수
- ▷ 17대,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 한나라당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 ▷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 ▷ 국회 디지털포럼 회장